

미래부 2.5GHz대역 주파수 할당 재공고

최저경쟁가 2627억 산정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모바일인터넷이 지난 3월 20일 기간통신사업(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 TDD))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2.5GHz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을 재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2.5GHz대역 주파수는 신규사업자가 휴대인터넷(와이브로)과 LTE TDD 중 하나의 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와이브로 정책방향(2013년 10월)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 1월에 공고한 내용에서 이용 기간이 5년에서 4년9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최저경쟁가격만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할당공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MHz대역 40MHz폭이다.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은 와이브로 또는 LTE TDD 중 하나를 선택해 할당을 신청토록 했다.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규사

업자와 기존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했다.

만일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경매 참가 전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돼야 한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하고, 경매 방식으로는 경매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동시오피스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최저경쟁가격은 이동통신(LTE TDD)의 경우 2627억원, 와이브로의 경우 489억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의 취지에 맞게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627억원이 적용된다.

미래부는 이달 초에 주파수할당 공고가 이뤄지면 6월 초까지 주파수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2.5GHz 대역 주파수 하반기 경매

미래부, 할당계획 공고

미래창조과학부가 1일 2.5GHz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했다. 6월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하반기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공고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지난 3월 20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2.5GHz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을 재공고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7일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철회한 KMI는 3월에 시분할방식 룡텁에볼 루션(LTE TDD) 기반 이동통신 사업허가 신청을 재접수했다.

지난 1월과 달리 주파수 이용기간이 5년에서 4년9개월로 축소됐고, 최저경쟁가격이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최저 경쟁 가격은 LTE TDD가 2790억원에서

2627억원으로, 와이브로가 523억원에서 489억원으로 조정됐다.

할당대상 주파수·대역 폭은 2575~2615MHz대역 40MHz폭이며, 주파수 용도와 기술방식은 와이브로 혹은 LTE TDD 중 선택해 할당을 신청토록 했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하고, 경매방식으로는 경매 과열방지 및 합리적 경쟁을 위해 동시옴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LTE TDD와 와이브로 사업자가 모두 경매에 참여하면 최저경쟁가격은 LTE TDD의 최저경쟁가격인 2627억원이 적용된다.

미래부는 6월 초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kim@etnews.com

디지털타임스

2014년 05월 02일 금요일 006면 정보통신

2.5GHz대역 주파수 할당 재공고

이용기간 5년서 4년9개월로 축소... 6월 경매실시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LTE-TDD 기술 방식)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2.5GHz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재공고 한다고 1일 밝혔다.

2.5GHz 대역 주파수는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TDD(시분할) 중 하나의 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와이브로 정책방향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번 공고는 이용기간이 5년에서 4년9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최저경쟁가격이 변경된 점을 제외하면 지난 1월에 공고 내용과 같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MHz 대역 40MHz폭이며,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규사업자와 기존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주파수 할당신청 이전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경매 참가 전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돼야 한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방식을 적용하고, 경매방식으로는 경매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20라운드의 동시옴입찰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최저경쟁가격은 이동통신(LTE TDD)의 경우 2627억원,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의 경우 489억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의 취지에 맞게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627억원이 적용된다.

미래부는 5월 초에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뤄지면 6월 초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트래픽 급증·기술진화 맞춰 전파자원 효율적 배분해야”

전파정책 및 기술 워크숍

유휴 주파수 활용 방안으로 스몰셀 도입
서로 다른 LTE 방식 묶어 주파수 확보를

전파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현행 전파 기득권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회장 이호진, ETRI 연구위원)는 지난 30일 통신·방송계의 핵심 현안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스마트 전파정책 및 기술’을 주제로 ‘전파정책 및 기술 워크숍(조직위원장 인하대 김재명 교수)’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에서 주제강연에 나선 권현영 광운대 교수는 “주파수 계획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등이 있지만, 정책을 성공적으로 끌어갈 세밀한 액션 플랜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과 기술진화에 맞춰 주파수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공유기술 개발 및 관련 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에 의하면 2012년 1월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2만3566TB에서 올해 1월 기준 7만2938TB로 3배 이상 늘었다.

권 교수는 늘어나는 무선통신 트래픽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최소 766MHz에서 최대 1000MHz까지의 대역폭이 이동통신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CP는 주제발표에 이어 제1부 세션에서 새로운 전파정책 구현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파연구센터를 오는 2018년까지 전국 거점 대학에 5개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준밀리미터파 및 스펙트럼공학 연구센터는 2곳이 설립돼 있고 향후 정부는 전파 플랫폼, 에너지응용, 전파의료 및 영상, 전파와 환경 연구센터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장 CP는 또 “지난해 전파 R&D 예산으로 인프라



2014 전파자원 정책 및 기술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주파수 정책 강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원천기술에 213.5억원, ETRI 지원에 148억원이 쓰였다”며 “이를 분석해보면 기업과제 비중이 낮고, 중견기업 참여가 2.1%에 불과한데다 대학과제는 과제 간 시너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봉규 연세대 교수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을 ‘IoE’(The Internet Of Everything)로 설명하며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다보니 이통3사가 내년 1월부터 사물인터넷 개념으로 쓰던 무선호출기(삐삐)를 재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며 “IoE를 위한 유휴 주파수 활용 방안으로 스몰셀을 도입하면 주파수 공유확대와 트래픽 분산이 이루어져 주파수 이용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몰셀은 보통 안테나당 10W급 이하의 소출력 기지국 장비로, 소규모 공간에서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흥재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동통신 주파수 비용절감 및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1MHz 당 매출이 지난 2010년 1140억원이고, 2015년엔 757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주파수 단위당 매출폭이 급속히 줄고 있다”며 “이는 이동통신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주파수 수입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 이를 망투자 실적과 연계한 매칭펀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 세션에서 김남 충북대 교수는 “생활밀착형 주파수 활용 기술 발전에 따라 신규 주파수 확보 및 회수·재배치가 필요하다”며 “도로 교통 물체 감시용 주파수 활용연구와 차량 환경 무선접속(WAV

E)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용 주파수 확보 및 회수·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주파수 수요산출 및 확보방안’ 발표에서 “무선트래픽이 지난해 7만2837TB에서 올해 11만8898TB로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주파수 수요도 2020년이 되면 최대 1353MHz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홍 교수는 지난해 이통A사의 강남 기지국을 예로 들며 “조사해보니 1인당 하루 최대 트래픽의 한달 평균이 530GB”라며 주파수 확보방안으로 서로 다른 LTE 방식을 하나로 묶어 사용하는 ‘FDD(주파수분할)-TDD(시분할)’과 비허가대역이용 등을 꼽았다.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는 “700MHz대역에서 약 100MHz 이상의 유휴대역이 발생하고 현재 65MHz대역폭이 용도 미할당 상태로 남아있다”며 “이를 철도, 재난 등 공공요구에 대한 주파수 및 통신방식 단일화를 위한 가칭 ‘공공 광대역 통신망’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GHz대역 활용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장대익 ETRI 위성휴대방송통신연구실장은 “2.1GHz대역은 모바일 트래픽과 비상시 통신을 위한 지상통신용 및 위성통신용으로 활용하면 주파수 이용효율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며 “지상+위성 단일 칩셋·단말은 구현이 완료됐고, 향후 위성-지상 겸용(동일주파수) 단말 구현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휴대폰 더 싼 곳 찾아 3만리’ 없어질 듯

단말기 유통 개선법 국회 未放委 통과... 뭐가 바뀌나

앞으로는 값싼 휴대폰이나 ‘공짜폰’을 파는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찾아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또 고가(高價)의 단말기를 살 때 주어지는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통신 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에 묶여 있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지난 30일 1년 만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단통법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 가이드라인(27만원)을 넘어선 100만원대 보조금이 뿌려지던

‘2·11 대란’ 같은 사태도 사라질 전망이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의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이통사들이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역과 시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휴대폰 보조금이 평준화돼, 어느 지역에선 거의 공짜로 구입하는 휴대폰을 다른 지방에선 비싸게 마련하는 ‘소비자 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가 제품별 보조금 규모를 인터넷과 판매점에 일일이 공개해 전국 어디서든 큰 가격 차이 없이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보조금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도

보조금 전국 어디나 동일
고객에 제품별 보조금 공개
보조금 원치 않는 소비자는
그만큼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들, 출고價도 낮출 듯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쓰던 스마트폰을 물려받은 자녀가 이통사 대리점에서 ‘유심칩’만 갈아 끼우고 가입하면 지금까지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휴대폰 구입에 따른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일정액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KT 관계자는 “할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심만 갈아 끼우는 고객도 할인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고폰이나 중저

가폰을 이용하는 고객도 늘어날 전망이다.

스마트폰의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싼 휴대폰을 프로모션(판매 촉진)해서 파는 구조 때문에 통신비용(휴대폰 구매비 포함)이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출시한 뒤 특정 지역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해 매출을 확대하는 마케팅 전략도 구사했다.

하지만 단통법은 시행 후 3년 동안 휴대폰 제조사들에 장려금의 규모와 출고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해, 기업들은 장려금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 정부에선 이를 통해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낮아지고 다양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동훈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예상되는 변화들

- 단말기별 보조금 액수를 미리 알고 구입 가능.
- 값싼 휴대폰이나 ‘공짜폰’ 파는 대리점 찾아다닐 필요 없음.
- 중저가폰-중고폰 선택하면 보조금 안 받는 대신 요금 할인 가능.
- 자신의 음성·데이터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 선택 가능.
- 다양한 가격대의 휴대폰이 등장해 기기 선택의 폭 넓어짐

불법보조금 근절 ‘단말기유통법’ 오늘 국회 의결

이동통신 업계의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그간 여야 대립으로 국회 처리가 지연됐던 단통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5월 조

해진(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 1년 만이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는 내가 사려는 단말기에 보조금이 얼마나 붙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 대신 같은 금액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매일경제

2014년 05월 02일 금요일 A14면 IT

휴대폰, 어디서든 같은 가격에 산다

단말기유통법 10월 시행 ... 보조금대신 요금할인 가능

오는 10월부터 소비자들이 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등 어디서나 같은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단말기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쉽게 구분하고 휴대폰 보조금과 서비스 요금 할인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됐다. 단말기 유통법은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후 10월 1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휴대폰을 판매할 때 가입유형(신규, 기변), 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금지된다. 또 보조금 출고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보조

금 공시제’와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도 도입된다.

이통사는 대리점에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면 안 되고 단말기 가격 할인을 이유로 가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요금제 등을 강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휴대폰 유통 과정에서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규제된다. 황지혜 기자

‘단말기유통법’ 통과 눈앞 이통시장 혼탁 사라질까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10월부터 시행
휴대폰 출고가·지원금 등 온라인 공개
마케팅 정상화·통신료 인하 여부 관심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이동통신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보조금으로 얼룩진 이통업계의 마케팅이 정상화되고 출고가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이 통과되면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은 이통업계에 대한 보조금 규제가 먹히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통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이 거듭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1년여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통사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보조금 과열 경쟁이 사라지면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해 영업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도 판매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이 의무화돼 출고가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라도 같은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보다 싸게 사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특정 시기에 보조금을 많이 풀어 고가의 스마트폰을 공짜나 다름없이 판매했다. 그러나 이미 제값을 주고 스마트폰을 구입한 대다수 소비자들은 ‘상대적 차별’을 받았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와 LG 등 제조사들은 정부에 휴대전화 판매 관련 영업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판매 장려금을 정부에 제출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단통법 시행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슈 앤 뷰 단통법 10월 시행...유통구조 어떻게 바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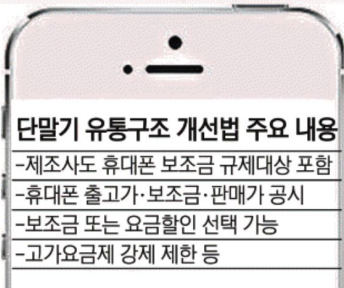


공짜폰·대박할인 사라진다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시 의무화... ‘보조금 사기·호갱님’도 없어져

‘공짜폰’ ‘대박할인’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80~100만 원대의 스마트폰에 보조금을 얹고, 24개월 약정할인까지 더해 휴대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속이는 대리점·판매점들의 상술이다.
앞으로는 이런 허위·과장 광고가 사라지게 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조금 공시를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단통법의 핵심은 휴대폰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시 의무화다. 소비자들이 얼마의 보조금을 받는 지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단통법 시행으로 유통구조는 크게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86만 원대의 갤럭시 S5에 대해 보조금을 25만원 준다고 공시했다면, 갤럭시 S5의 실질적인 가격은 61만 원인 것이다. 판매·대리점 등

출고가에 보조금 미리 반영못해
제조사 단말기 출고가 인하 기대
로 이어지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잘 모르는 소비자, 이른바 ‘호갱’ (호구 고객)에게 보조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약정할인을 휴대폰 할인처럼 속여 보조금을 ‘꿀꺽’하는 일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통상 이동사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휴대폰 판매를 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판매점 등은 이 가운데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남긴다. 때문에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덜 지급할수록 판매점은 이익을 보는 구조였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돼 이른바 ‘보조금 사기’와 호갱이 사라지는 것이다. 각종 특별 할인을 틈타 약삭빠르게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 챙긴 소비자 역시 사라진다. 소비자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는 얘기다.
‘가격 부풀리기’의 온상이었던 제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주요 내용
- 제조사도 휴대폰 보조금 규제대상 포함
- 휴대폰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시
-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기능
- 고가요금제 강제 제한 등

사의 휴대폰 출고기도 인하될 공산이 크다. 보조금이 공개되는 만큼 보조금을 출고가에 미리 반영해 가격 부풀리기를 할 유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비자는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상당수의 고객들이 보조금보다는 요금 할인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일시에 보조금을 받기 보다는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면서 요금 할인을 지속적으로 받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잦은 휴대폰 교체로 인한 부담이 적어진다. 반대로 제조사는 휴대폰 판매량 저하라는 악재

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단통법은 휴대폰 판매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호갱’을 상대로 이익을 취해 오던 상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의 판매점과 대리점이 구조조정의 파고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는 밀릴 것 없다는 분위기다. 요금할인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지만, 보조금 대란이 사라지면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서다. 다만 통신사별로는 희비가 다소 엇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각 통신사별로 처한 위치에 따라 단통법을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다”며 “이에 따라 업체별로 단통법 시행에 따른 전략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남곤 중앙증권 애널리스트는 “단통법으로 소비자와 애플폰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이익을 보는 반면, 제조사와 판매·대리점은 다소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해외 제조사는 적용 제외...국내사만 피해 볼수도

■ 단통법 부작용은 없다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이 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 등 제조회사는 장려금과 출고가 관련 자료

를 주무 부처인 미래부에 보고해야 한다. 법안 논의 및 심의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부 독소 조항이 개정됐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불만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국내에 풀고 있는 장려금 규모가 유출될 경우 외국 통신

사와의 판매협상에서 불리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애플 등 해외 제조사는 단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처럼 영업을 할 수 있어 국내 제조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단통법 시행 이후 당초 의도

대로 휴대폰 가격이 떨어지고, 유통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을 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예전 보다 더 높은 값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 과열이 근본적으로 ‘시장 과포화’가 원인인 만큼 단통법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능현기자

한겨레

2014년 05월 02일 금요일
017면 경제‘말썽’ 이동통신 유통점 인증제
수수료 내리고 유효기간 늘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가 방송통신 위원회를 뒷배 삼아 이동통신 유통점 인증제 및 통신판매사 자격검정제를 추진하면서 수수료를 너무 높게 책정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한겨레〉 4월28일치 17면 참조)과 관련해, 협회가 유통점 인증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1일 “유통점 쪽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인증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인증 수수료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애초 45만원에서 10만원 안팎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얼마나 보전해주기로 하느냐에 따라 수수료 인하 폭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쪽은 “통신시장유통질서건전화위원회에 이동통신 유통업계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협회와 이통 3사는 유통점 인증제 및 통신판매사 자격검정제를 5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인증제 수수료를 45만원으로 전격 결정했다. 더욱이 해마다 22만5000원씩 내고 재인증을 받게 해, 유통점들을 상대로 수익 사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통점들은 불완전 판매 및 불법 행위를 사실상 조장하는 이통사들의 영업정책은 놔두고 유통점 인증제만 시행하는 점을 들어, 이통사들이 유통점 장악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통신사업자 허가 신청 수시로 못한다

미래부, 개정안 정부 입법 추진
비합리적인 행정 낭비 줄일 것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사업자 허가 신청을 수시로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제4이통 신청 남발이 줄어들 전망이다.

1일 손승헌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사업자들이 수시로 통신 사업자 허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은 정부가 기간통신사 허가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수요가 있을 경우 신청 기간을 정해 접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를 거칠 경우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부의 이 같은 법개정 추진은 수시로 사업자들이 통신 사업자 허가 신청을 하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심사를 위해 수천만원이 투입되는 예산 등 행정적인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통신 사업자 허가 심사에는 20명의 심사위원이 2~3일간 합숙하는 등 수십명의 전문가들이 동원된다.

법 개정안은 통신 사업자 허가 신청의 경우 시장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고를 내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면서 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제4이통 신청 시 비합리적인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허가 신청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심사 통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 추진 자체가 제4이통 추진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요금 인하를 통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높인다는 취지를 내세우면서 제4이통 사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튼튼한 재무구조 기반 없이 허가 신청만 남발하면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법이 통과될 경우 제4이통에 도전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정부의 공고시까지 기다려 신청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지난 3월 기간 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미래부에 내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KMI는 지난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일까지 보증 증권 등 서류를 제대로 내지 못해 철회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신청을 했다.

KMI의 신청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이전 네 번의 경우에는 재무구조 심사에서 과락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제4이통 사업에 두 번 도전해 재무구조 부문에서 점수 미달로 떨어졌었다.

정부는 통신사업이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선 재무구조 부문의 기반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한선 기자 griffin@

통신 3사, 출혈경쟁에 상처뿐인 1분기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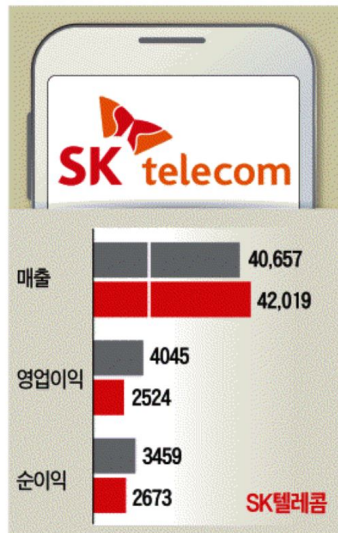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예상대로 초라한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23 대란' '2·11 대란' 등 연초부터 치열했던 보조금 경쟁이 고스란히 실적 악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서비스 장애와 유선 매출 감소 등 개별 악재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마케팅 비용 증가로 실적 악화
KT는 1분기 41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순이익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KT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절반 이상(58.6%) 줄어든 152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5조 846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2% 줄었다.

하루 전인 29일 실적을 발표한 SK텔레콤도 1분기 매출은 4조 201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7.6%, 22.7% 줄어든 2524억원과 2673억원에 그쳤다.

앞서 28일 실적을 내놓은 LG유플러스도 1분기 순이익이 26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3.9%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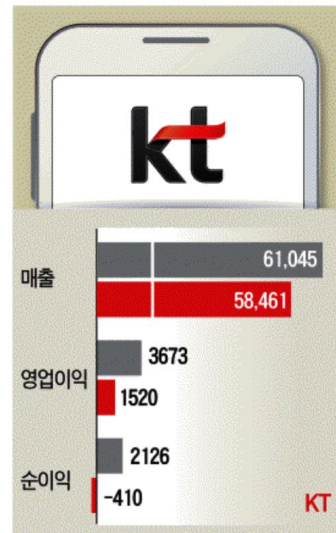
이동통신 3사 1분기 실적 (단위:억원)



SKT, 영업이익 37% 줄어
KT, 410억원 순손실
LGU+, 순이익 63% 급감
마케팅 비용이 큰 부담

감했다. 영업이익도 8.1% 줄어든 113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조 7804억원으로 2.8%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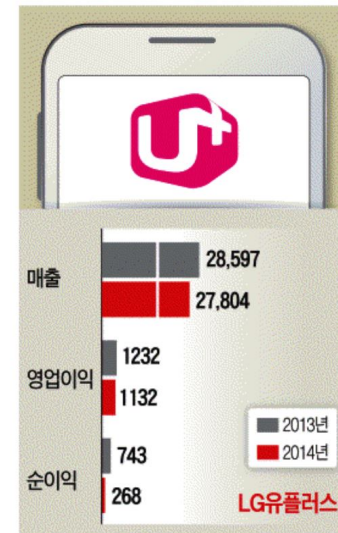
실적 악화의 주원인은 마케팅



비용 증가다. 다른 통신사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해 벌인 보조금 출혈 경쟁이 결국 통신 3사 모두에 이익 감소라는 상처만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SK텔레콤은 1분기 마케팅 비용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1.4% 많은 1조 1000억원을 쏟아부었다. KT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1% 많은 7752억원을 1분기 마케팅 비용으로 썼다. LG유플러스 역시 1분기 마케팅 비용이 22.6% 증가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한 5511억원에 달했다.

회사별 악재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 SK텔레콤은 지난달 발생한 통신서비스 장애를 요금 감면 방식으로 보상했다. 이 비용이 1분기 실적에 반영돼 매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보상금이 최소 300억 원대에서 최대 12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유선 부문 실적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1분기 유선 매출은

유선전화 가입자와 통화량 감소로 1조 4201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보다 6.7% 줄었다.

◆출고가 인하·고객 지키기

올 1분기 실적 악화로 휴대폰 출고가 인하, 기존 고객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통신사의 새로운 고객 유치 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신 3사는 제조사와 출고가 인하 협상에 한창이다. KT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단독 영업기간을 맞아 삼성전자의 KT 전용 단말기 '갤럭시S4미니'와 LG전자의 전용 단말기 '옵티머스GK' 가격을 기존 출고가의 절반 수준으로 내린 25만 9600원에 팔기 시작했다. LG유플러스도 단독 영업기간인 지난달 5일 LG전자의 전용 단말기 'LG GX' 출고가를 89만 9800원에서 63만 8000원으로 낮춰 팔았다.

기존 고객 잡기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KT는 24일 단독 영업을 앞두고 1년간 누적 기본료가 70만원이 넘는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휴대폰 교체 프로그램 '스펀지 플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김보영기자 wing@hankyung.com

1분기 이동통신3사 실적 살펴보니...

‘외형’ 키운 SK텔 ‘실속’ 챙긴 LG U+

**SK텔, 번호이동 128만 유치 1위
LG U+, 가입자당 평균매출 앞서
마케팅비용 대비 효율적 성과**

이동통신 3위 기업인 LG U+가 올 1·4분기 번호 이동시장에서 마케팅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 이통3사 중 가장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이통 1위 기업인 SK텔레콤은 마케팅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거뒀다.

다만 SK텔레콤은 같은 시기 번호이동 실적 규모 기준으로 이통3사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SK텔레콤이 1·4분기에 올해 역점 과제인 이통시장점유율 50% 수성에 몰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의 올해 1·4분기 번호이동 실적(자사 번호이동 포함)을 집계한 결과 SK텔레콤 128만590건, KT 83만9163건, LG U+ 76만4223건 등이었다.

번호이동 규모 측면에서 SK텔레콤이 이통 시장 1위 사업자답게 단연 선두를 차지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1·4분기에도 이통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수성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2년 신세기통신과 공식 합병 이

1·4분기 이통3사 번호이동·
마케팅비·영업이익·ARPU 현황

구 분	SK텔레콤	KT	LG U+
번호이동(건)	128만590	83만9163	76만4223
마케팅비(원)	1조1000억	7752억	5511억
영업이익(원)	2524억	1520억	1132억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3만5309	3만2902	3만5362

자료: 이통3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후 국내 이통시장에서 줄곧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왔다.

같은 시기 이통3사는 마케팅비용으로 SK텔레콤 1조1000억원, KT 7752억원, LG U+ 5511억원 등을 쏟아부었다.

특히 번호이동 고객 유치에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을 쏟아붓는 점을 감안하면 이통3사는 1·4분기에 가입자 쟁탈전으로 총 2조4263억원을 투입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통3사는 올 1·4분기에 일명 ‘보조금 대란’이라고 불리는 ‘123 대란’ ‘211 대란’ ‘226 대란’ 등으로 인해 마케팅 비용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만일 1·4분기에 정부가 영업정지 조치를 비롯한 불법 보조금 지급 제재를 강화하지 않았다면 마케팅비 투입액은 더욱 증가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통3사는 각각 SK텔레콤 4월 5일~5월 19일, KT 3월 13일~4월 26일, LG U+ 3월 13일~4월 14일·4월 27일~5월 18일 등으로 순차적 영업정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통3사가 모두 영업정지에서 벗어나 정상 영업에 들어가는 시점은 오는 20일이다.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 대비 영업이익도 LG U+가 실속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통3사가 올 1·4분기에 ‘보조금 대란’ 여파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LG U+가 그나마 ‘장사’를 실속 있게 했다는 평가다.

올 1·4분기에 5511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쓴 LG U+는 1132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SK텔레콤의 경우 1·4분기에 1조10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 252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KT는 1·4분기에 7752억원의 마케팅비를 투자하고도 152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데 그쳤다.

이외에 올 1·4분기에 이통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에서도 LG U+가 처음으로 SK텔레콤을 추월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같은 시기 ARPU는 LG U+가 3만5362원을, SK텔레콤은 3만5309원이었다. LG U+가 SK텔레콤보다 53원 높은 ARPU를 보인 것이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꿀찌 견제하는 이통시장 ‘이상한 삼국지’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비즈니스의 냉정한 현실에 따라 이통통신사들의 보이지 않는 공조체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 주파수 경매과정에서 손을 맞잡았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린 반면,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성장세를 견제하기 위해 SK텔레콤과 KT가 손을 맞잡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통신3사간 시장상황과 이해관계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견제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통신시장의 대립구도는 앞서 있는 SK텔레콤과 KT의 추격전, LG유플러스의 캐스팅보트 구도로 형성됐다. 2009년 말 KT가 아이폰을 도입하며 가입자를 100만명 가량 확대하자 SK텔레콤은 갤럭시S로 반격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주파수가 이통사들의 견제구도를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1.8GHz 인접대역 할당은 특혜”라는 주장을 함께 펼치며 공조체제를

를 가동하자 KT는 “두 회사가 담합을 하고 있다”며 맞섰다. KT는 지난해 1월 영업정지 당시에는 LG유플러스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신고하는 등 ‘샌드위치’ 형태로 협공을 당하기도

모집하고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신고하며 반격했다. 또 이 회사는 LG유플러스와 팬택이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선구매 문제와 갈등을 보이는 상황에서 팬택 단말기 구입 물량을 보증

SKT, 주파수 경매때 LGU+와 손잡더니 영업정지때 예약가입자 모집 신고 등 불화

했다.

올해에는 시장경쟁 상황을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극한 대립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이후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LG유플러스가 불법으로 예약가입자를

하며 팬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두 회사가 극한 갈등 양상에 치닫는 동안 SK텔레콤과 KT가 은근히 협력하는 정황이 포착된다. KT는 LG유플러스의 팬택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동참했다가, 두 회사가 갈등을 겪자 하루만에 출고가를 올려 LG유플러스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KT는 SK텔레콤의 신고에 동참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단독영

업기간 중 가입자 모집건수가 일평균 8000건을 넘는데 대해 부당보조금의 결과라고 신고했지만, KT가 일 평균 1만3000명이 넘는 가입자를 모집하는 상황에서도 은근히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직원들이 상대 회사를 드나들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이처럼 최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KT 구도가 형성된 것은 LG유플러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한 약진으로 5대 3대 2의 전통적인 시장 점유율 구도가 균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3사의 경쟁 구도가 있다보니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현재의 경쟁구도가 언제까지 같지는 모른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3사간 정당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닌 감정싸움으로 흐르는 구도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UHD 방송 '눈앞'...콘텐츠 부족 '깜깜'

〈초고화질〉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초고화질(UHD) 방송 콘텐츠 확보에 팔을 걷었다. 각 사업자가 잇따라 UHD 상용 서비스 개시 일정을 정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방영할 UHD 콘텐츠가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두 업계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일반인 대상 공모전 계획까지 세우며 UHD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연내 UHD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인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현재 확보한 UHD 콘텐츠 분량은 수백분 가량이다. 실제 셋톱프리 방식으로 지난달 30일 UHD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 SK브로드밴드가 확보한 UHD 콘텐츠 분량 456분이다. 케이블TV 업계가 지난달 10일 개국한 UHD 전용채널 유맥스(UMAX)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홈초이스는 현재까지 100시간(6000분) 분량을 마련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공급업체와 계속 U

위성방송·IPTV 사업자들 프로그램 제작·공모전 등 추진

HD 콘텐츠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총 분량은 명확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UHD 상용화 시기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수급 상황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유료방송업계가 UHD 콘텐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싼 콘텐츠 가격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입 UHD 콘텐츠 가격은 시간 당 5000만~2억원 수준이다. 2000만~3000만원 가격대를 형성한 고화질(HD) 콘텐츠 대비 최고 10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8월 구축한 UHD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내달 개국 예정인 UHD 전용 채널 운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지난 해 12월 정부의 다목적실용위성으로 촬영한 영상

자료를 UHD 포맷으로 변환한 프로그램, 한류 문화 다큐멘터리 등을 자체 제작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제작, 송출, 위성전송, 수신 등 UHD 콘텐츠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관련된 ‘워크플로’를 확립했다”며 “오는 11월까지 보급형 UHD 셋톱박스를 출시해 UHD 방송을 대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456분 분량 UHD 콘텐츠를 우선 주문형 비디오(VoD)로 제공한다.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대중을 대상으로 공모전, 단편영화제 등을 개최하면서 UHD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 제작사가 공급하는 UHD 콘텐츠가 적은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제작 비용 탓에 방송사업자가 자체 제작에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UHD 시장에 무작정 진입하기보다 체계적으로 콘텐츠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IPTV가입자 1000만 눈앞... 케이블과 본격 전쟁 예고

매달 15만명 이상씩 가입 주요3사 경쟁 치열해질듯

IPTV 가입자가 900만명을 넘어섰다. IPTV는 연내 가입자 1000만명을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케이블TV 업계와의 경쟁은 물론 IPTV 사업자간의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IPTV 업계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의 가입고객이 3월 말 기준으로 약 910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800만을 돌파한 지 5개월만에 9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업체별로는 KT가 515만8300명, SK브로드밴드가 226만7800명, LG유플러스가 167만2000명의 고객을 각각 확보했다.

IPTV 가입자는 지난해 9월부터 3월까지 매달 평균 15만명 이상 늘어났다.

특히 이동통신과 긴밀하게 마케팅과 영업을 진행하는 IPTV 업계가 이통사 영업정지 칼바람 속에서도 가입자를 꾸준히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IPTV 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상품을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가 고객들에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추세를 미뤄볼 때 이르면 9~10월경 1000만 가입자를 확보해 전체 유



1일 서울 중구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한 고객이 LG유플러스 IPTV인 tvG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유통일기자 eddieyou@

료방송 가입자(약 2500만명, 지난해 말 기준)의 4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빠른 가입자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IPTV 업계는 초고화질(UHD) 등을 앞세워 시장 공세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해 KT, LG유플러스가 UHD 서비스를 일부 시작했거나 준비중으로, 하반기에는 모든 IPTV

업계가 UHD 방송을 제공할 예정이다. IPTV 업계는 케이블TV 업계에 비해 UHD 서비스 시점이 한 발 늦었지만, 차별화된 콘텐츠 등으로 승부를 걸 계획이다.

업계는 또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 서면서 IPTV 사업자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908만명의 IPTV가입자 중 절반 가량(약 56%)이 KT 고객이다.

IPTV 업체 한 임원은 "그동안은 IPTV 업체들끼리 뭉쳐서 케이블TV 가입자를 유치하기에 바빴지만 앞으로는 IPTV 3개 사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000만 가입자 고지가 보이는 만큼 이제부터는 사업 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dubs45@

금융사 '징벌적 손해배제' 국회 처리 무산

야당 문제 제기로... 6월 재논의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 요건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용정보보호법)을 의결하려 했으나 현재 논의된 정도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처리하지 못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저야할 보상 범위를 '손

해액의 3배 이내'로 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정보 유출 자체가 아닌 유출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있어야 하고, 금융회사가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지운 것도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신용정보보호법의 핵심은 입증 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도입인데 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만 빼고는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더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한겨레

2014년 05월 02일 금요일 016면 경제

'징벌적 손해배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불발

야 "정보유출 자체를 손해로 간주해야 효과"

금융위 난색...임시국회 처리 못할지도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할 때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못 넘었다. 하루 전만 해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서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이라던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이 때문에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째로 처리되지 못하는 이번이 벌어졌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미 하도급법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가해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은 이렇다. 금융회사가 고의 혹은 중대과실로 고객정보를 유출해

서 피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이런 방안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손해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내야 한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유출한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되고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등으로 입은 구체적인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야당 쪽에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만으로도 배상 책임을 부여하자고 주장해왔다. 제도 설계를 두고 간극이 컸는데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은, 난색을 표해오던 금융당국이 제도 도입을 받아들이는 대신, 야당도 애초 발의한 법안 내용에서 한발 물러서기로 하면서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

당 의원들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만 합의됐을 뿐, 정보 유출 자체를 손해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은 정부(금융위원회) 반대로 다 빠져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소송이나 배상명령 등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제도마저 빈껍데기만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도 영향을 끼쳤다. 야당 쪽은 최소한 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는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황보연 기자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제동

신용정보 관리 어떻게 바뀌나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 간 정보 공유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활용한 정보를 한 달 안에 삭제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수개월째 여야와 금융당국이 공방을 벌여온 사안이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광범위하게 유통되며 허술하게 관리돼온 개인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대책들이다. 그러나 두 법안과 함께 하루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나란히 통과했던 신용정보이용·보호법(신용정보법)은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제동**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고객 동의가 없어도 여러 계열사·자회사와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카드사 정보 유출 때도 국민은행 등 금융지주 계열사의 고객 정보까지 빠져나가면서 파장이 일었다. 예를 들어 카드사 한 군데서만 고객 정보가 뚫려도 은행 고객들의 정보까지 고스란히 털리는 식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내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에 필요한 경우는 시행령으로 정한 한도 안에서 허용되며, 한달 안에 삭제하도록 했다. 케이비(KB)·신한·우리·농협 등 금융지주 13곳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보관리 업무 재위탁 금지** 고객 정보 관리 업무를 외부업체에 맡길 때 재위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케 이비와 농협, 롯데카드 모두 정보관리 업무를 위

국회 정무위 통과한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안

구분	주요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 고객정보관리 업무 재위탁 금지, 금융위가 허용할 경우 예외 • 전자금융거래 개인정보 보존기간 5년 경과 후 파기 의무부과 •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근거 완화
금융지주회사법	• 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 정보공유 금지 • 내부 경영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하되, 한달 이내 삭제
금융위 설치법	• 배상명령을 금융위 소관 업무로 추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만 통과된 법안

신용정보이용·보호법	• 신용정보집중기관 설치·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규제 및 겸업 금지 • 개인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 전송 금지 • 금융회사가 고의·중대과실로 고객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끼친 경우 3배까지 배상 책임
------------	---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

정보공유 원칙적으로 금지
꼭 필요할 땐 한달 이내 삭제
정보관리 업무 재위탁도 금지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안돼
관리업무 통합기구 설치 무산

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위탁은 허용하더라도 2차, 3차 위탁 등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여러 업체를 거칠수록 관리가 어렵고 정보유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금융위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배상명령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소송을 내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배상을 명령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에 이런 배상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애초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게 될 금융소비자원에 배상명령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함께 제출됐다. 하지만 금소위 설치 방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배상명령도 제도 도입이 반쪽만 이루어진 모양새다.

■ **신용정보법은 통과 불발** 이날 정무위는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해주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때문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었던 제도개선 내용들이 통째로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 30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전문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 등으로 흩어져 있던 신용정보 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신용정보 관리 기관을 종전보다 공공성이 강한 기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별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도 까다로운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런 방안이 마련된 것은 민간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등이 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보험개발원은 2009~2012년 423만건에 이르는 제휴업체 회원들의 보험계약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보험사에 넘겼다. 넘어진 정보는 보험사의 전화영업 등에 활용됐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각각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고객 정보를 관리·활용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신용정보 유출 방지법’ 또 표류

여야 ‘징벌적 손해’ 다시 이견
6월 국회 합의 여부도 불투명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일명 ‘신용정보유출 방지법’ 개정이 무기한 표류하게 됐다. 여야가 바로 전날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합의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다시 틀어진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의결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전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쟁점 역시 여야가 그간 계속 부딪혔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항이었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큰 실효성이 없다”며 “법안소위로 넘겨 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개정안 의결에 반

대했다. 강 의원 등은 정보유출 피해의 입증 책임이 금융회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는 데다 배상명령제나 집단소송제가 수용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전체회의가 산화된 직후 기자들에게 “6월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협의해 신용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적 관심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6월 국회에서도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중요한 법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상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 여야 정무위 상임위원들이 대부분 교체될 예정이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 경우 사실상 9월 정기국회에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계열사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및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국민일보

2014년 05월 02일 금요일 012면 경제

정보유출 징벌적 배상 국회 통과 무산

정무위 소위 통과 불구 전체회의서 부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신용정보보호법 국회 처리가 1일 불발됐다. 이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마련한 대책이 또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

을 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이 피해액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 의무로 두지 않은 점, 집단 소송제가 제외된 점 등을 들며 반대하고 나섰다. 여야 의원들이 추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6월 국회에서 재

논의기로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 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이례적이다. 강 의원은 법안소위 야당 측 위원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 처리 불발로 각 금융협회에 흠어져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함께 무산됐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 부과된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 끝내 통과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6월 국회에서 잘

협의해서 신용정보보호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보호법 외에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 개인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금지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은 예정대로 통과됐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비 정합성' 사례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유출 손해 배상 및 피해 보상	없음	300만원 이내에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제32조의2 신설)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제4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영업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원칙적 금지	원칙적 금지(제50조 제5항 신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름 (제48조의2 수정)

줄속처리 정보보호법 '구멍'

신용정보·정보통신망법 상충 '법정합성' 훼손 등

132개 법률 일괄통과... 유사규정 통합 취지 무색

대형 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법제도 정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던 국회가 정작 관련법 처리과정에선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

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련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줄속으로 처리되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미뤄졌던 현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진 것은 다행이지만, 깊이 토론하고 심사숙고해 체계를 갖춰나가야 할 정보보호 관련 법률까지 한꺼번에 줄속으로 처리한 것이 문제다. 동일한 맥락과 취지를 갖췄다 하더라도 개별법률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서 '법률 정합성'을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위원회가 마련한 '정보유출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이다.

그동안 기업이 정보유출을 해도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처벌이 미약했고, 정보가 유출돼 불편과 피해를 겪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는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그런데 이 방안이 개별 법에서 서로 다른 규정으로 굳어진 것이

다. 미방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132개 법률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이중 정보통신망법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는데, 제32조의2를 신설해 정보유출시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위는 신용정보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을 통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신설하기로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고 법안소위를 통과시켰으나, 30일 이어진 전체회의에선 논란 끝에 처리를 보류했다. 이 법안은 정보유출로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 대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는 "정보유출이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은 300만원 이하, 신용정보법은 손해액의 3배로 서로 기준이 다르다"면서 "온라인 증권사처럼 두 법률의 관할을 동시에 받는 기업일 경우 만약 정보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법률 정합성에 문제가 생겨 법 적용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업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함부로 유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이 역시 정합성에서 문제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제50조제5항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나 수신자를 기망하는 각종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법은 영업 목적의 정보공유를 허용했던 제48조의2를 '1개월 이내 공유'로 기간을 축소하는데 그쳤다.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해 영업 목적의 정보제공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개별(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중복, 유사 규정을 통합하고 투명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법정부 TF를 통해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정합성을 높이고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밀린 타법 처리와 묶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정보보호 법률까지 한꺼번에 처리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행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소관 부처와 상임위가 각계에 흩어져 있어, 공동으로 토론할 수 있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법제도를 완성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상임위가 법정부 TF 논의 내용을 큰 틀에서 수용하는 신중한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보보호 관련 여야정 협의체는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태로,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한 법정부TF가 법률 개선안을 5월까지 마련해 6월 경 국회로 넘기고, 국회는 6월에 여야정 협의체를 본격 구성해 정보보호법 정합성 등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정보유출 피해부담액 기업 ‘찜뚱’... 사회·개인이 덤터기

개인정보보호협 “기업 연 손실 3000억 그쳐”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관련 기업들이 입는 손실이 연간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해 평균 수천만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손실 규모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소극적인 탓에 사고 기업이 감당해야 할 피해의 상당 부분이 사회와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최근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개인정보의 가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입는 손실은 2011년 3747억원, 2012년 2788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사고대응 홍보비·고객이탈 손해...
KT 2012년 유출 손실액 1691억
175만건 털린 현대캐피탈 1410억
한해 수천만건 유출... 법 잣대 느슨
2005년 이후 손해책임 인정 3건
배상액 최대 5억6000만원 불과

기업별로 KT는 2012년 한 베테랑 프로그래머에 가입자 개인정보 873만건이 털려 1691억원의 손실을 봤다. KT는 사고대응 인건비로 44억원,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방어를 위한 IR(기업설명회) 대응비용 37억원, 고객 이탈 등 매출 손실 1609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현대캐피탈은 2011년 해커에 서버가 뚫

려 고객 금융정보 175만건이 유출됐고, 총 1410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어 넥슨이 418억원, 한화손해보험이 255억원, SK컴즈가 140억원, 앱손이 113억원, EBS가 93억원, 리딩투자증권이 62억원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이렇게 집계된 피해액은 2011년 2398억원, 2012년 1784억원이다. 사고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대기업에 한정된 수치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이를 공표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내 100대 기업이 산업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약 64%를 감안, 사고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중소기업체 피해액을 추산해 합산했다.

보고서는 이조차도 ‘작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인은 사법부의 보수적인 판결 행태다. 2005년 이후 법원에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2013년 SK컴즈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낸 280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났다. 2006년에는 국민은행 사고와 관련해 1000여명에게 20만원씩, 2005년엔 NC소프트 사고와 관련해 5명에게 10만원씩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됐다. 보고서는 “기업의 책임이 실제 배상될 경우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의 큰 액수”라며 “그 결과 책임이 있음에도 법원은 배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1125만건이 유출된 GS칼텍스의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금 기준(평균 20만원)을 적용하면 배상액은 2조2500억원에 이른다. 올해 1억여건의 유출사고를 낸 카드사들의 경우 그 책임은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법원의 책임 미루기는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며 “결국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배상 판결이 시작되고, 좋은 성과를 내던 기업

주요 사건 · 사고 기업 손실액			개인정보 유출 사건 · 사고로 인한 기업 손실액 (단위: 원)	
기업	유출 규모(건)	손실액(원)	*1억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 추정치	
			2011년	2012년
KT	873만	1691억	대응 인건비	373억 119억
현대캐피탈	175만	1410억	IR 대응비	309억 99억
넥슨	1320만	418억	매출 손실	3065억 2570억
한화손해보험	16만	255억	합계	3747억 2788억
SK컴즈 (네이트, 싸이월드)	3500만	140억		
앱손	35만	113억		
EBS	420만	93억		
리딩투자증권	2만6000	62억		

하나를 한순간에 파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객 피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이 또한 실효성은 의문이

다. 야당은 ‘유출’ 자체를 피해로 인정하는 취지로 법안을 냈지만, 보이스피싱 등 구체적인 피해로 연결된 때만 ‘피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 논리다.

“사기방지 위한 ‘전화번호 정지’ 대상을 한정 안해”

전기통신법 개정안, 정보인권 침해 우려

관련기관 요청때 미래장관에 권한
“악용뎌 집회·시위 공지 단체 피해”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전화사기 방지를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화사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관련 기관의 요청을 받은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 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하면서 전화번호 이용 정지 요청 대상을 정하지 않아 정보·수사기관 등의 악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쪽은 경찰이 불법이라고 보는 집회·시위를 공지했다는 이유로 해당 전화번호 이용이 즉각 정지되는 상황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은 2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킹센

터 등 시민단체들은 1일 공동명의로 긴급 성명을 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신설된 ‘행정기관의 전화정지제도’(제32조의 3)가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사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미래부 장관한테 관련 기관의 요청을 받은 전화번호 이용을 신속하게 정지할 수 있게 했는데, 대상을 보이스피싱이나 전화사기로 국한시키지 않아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킹센터 오병일 활동가는 “경찰이 불법으로 보이는 집회·시위를 공지했다는 이유로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 신청을 하고, 국가정보원 등이 정치적으로 걸끄러운 특정 인사의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 대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신설된 ‘휴대전화 본인확인제’(제32조의 4)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국

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국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했듯이, 케이시비(KCB) 직원이 카드 3사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고, 케이티(KT)에서도 10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본인확인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할 국회 미방위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명분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반인권, 이동통신 사업자 특혜’ 법안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미방위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충분한 토론 없이 전격 처리됐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거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KCPPI, 이하 협의회)는 정보시스템감리협회(KAISA, 이하 협회)와 개인정보관리의 점검 및 감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의 점검·감리’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공기관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지원에 관한 제반 정보를 교환·공유 ▲개인정보 보호 실태의 점검 및 감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보보호 컨설팅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에 나선다.

협약식에서 협회 이우용 회장은 “협회가 한국정보시스템감리협회와 한국정보시스템감리사협회가 통합해 출범한 비영리 전문가단체인 만큼 보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비즈니스와 생활 전반 등 모든 분야에 접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 김중구 부회장은 “협의회는 350만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주민등록번호 오·남용과 유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 준수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보안 구멍난 IE '탈출' 가속화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 IE 점유율 감소... 크롬·사파리 등 부상

IE 종속성 탈피 한목소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IE 탈출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IE가 아닌 웹브라우저의 활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IE의 보안 취약점까지 드러나면서 탈출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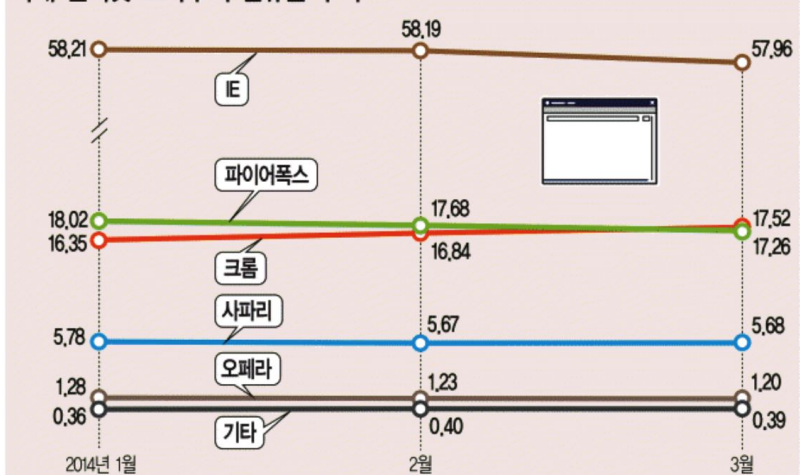
1일 시장조사업체 넷마켓세어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의 IE 점유율은 57.96%다. 올 초 58.21%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다.

대신 구글 크롬 브라우저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다. 크롬은 3월 기준으로 17.52%까지 점유율이 늘어났다. 6개월전만 해도 IE 점유율이 58.22%까지 늘어나고 크롬 점유율은 15.42%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그 간극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셈이다.

파이어폭스는 크롬에 다소 밀리면서 17.26%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및 애플 맥북 사용이 늘면서 사파리 브라우저 점유율도 5%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아직 4월 점유율 집계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4월에는 윈도우XP 지원종료와 이번 IE 보안취약점 발표로 인해 '탈MS' 현상이 두드러졌던 점을 감안할 때 IE 점유율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인터넷 브라우저 점유율 추이 (단위:%)



보안 전문가들은 "이전에도 IE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모바일 인터넷 이용 증가로 낮설음이 사라져 크롬이나 사파리 등 비IE 브라우저 이용률이 늘고 있었다"면서 "IE의 보안 취약점 때문에 이용자들이 브라우저를 교체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IE 취약점을 악용한 악성코드 공격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하우리차세대보안연구소는 "이번에 발견된 IE 보안 취약점은 IE에 적용된 메모리 보호기술인 ASLR과 DEP를 우회하기 위해 플래시를 이용한 최신 공격기법이 적용돼 있다"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공격자가 시스템의 메모리 전체에 접근해 검색 및 수정 권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보호

기술이 무력화되며 해커에게 PC 내용을 고스란히 탈취당하는 등 심각한 보안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내 웹 환경의 경우 전자상거래 결제나 금융거래 등 민감한 사이트일수록 IE에 최적화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브라우저를 교체하고 싶어도 교체할 수 없는 '아이러니'를 안고 있다.

보안 전문가는 "IE 종속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웹 환경이 IE에 편향돼 있어 이용자들이 타 브라우저를 이용할 경우 불편함이 많았기 때문"이라면서 "액티브X 등 IE 중심으로 구현된 각종 걸림돌들을 이 기회에 다 걷어내고 표준 웹 환경으로 전환해 IE 종속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황창규의 무리수

KT 윤리경영실 삼성맨 영입
'성희롱' 전력 물의 빚자 사표

황회장 '자기사람 심기' 입길 올라

삼성전자 출신의 황창규 케이티(KT) 회장이 '친정' 기업 출신들을 잇따라 핵심 임원으로 영입하면서 여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까지 받았던 삼성 전 임원을 불러들여 윤리경영실의 핵심 직책을 맡겼다가 <한겨레> 취재가 시작되자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했다. 윤리경영실이 임직원들의 사내 기강을 잡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황회장의 판단력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1일 케이티와 삼성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황 회장은 지난달 초 삼성 임원 출신의 7씨를 윤리경영실 핵심 임원으로 영입했다. 회장 취임 뒤 케이티엔에스(KTENS) 부장의 불법대출과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 악재가 잇따르자, 윤리경영 강화 방침을 밝히며 윤리경영실 조직을 강화하고 삼성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했다. 7씨는 삼성에서 감사 및 경영진단 일을 오래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가 삼성 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여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해 '주의 경고' 징계까지 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그는 부장들과 회식한 뒤 사무실로 들어와 늦게까지 일하고 있던 직원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포옹까지 했다. 일부 여직원이 너무 과했다고 판단해 문제 제기를 하자, 삼성은 사실조사를 거쳐 7씨에게 주의 경고 처분을 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실적 부진 책임까지 겹

쳐 경질됐고, 지난달 케이티로 영입됐다.

케이티 측은 "영입 때는 몰랐다. 나중에 뒷얘기로 들려 삼성화재 쪽에 문의했더니 부적절하긴 했지만 크게 문제삼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했으며, 특히 케이티 윤리경영실에 꼭 필요한 외부 전문가라고 (판단해) 그냥 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케이티 새노조의 이해관 대변인은 "황 회장이 윤리경영실에 자기 사람들 심기 위해 무리수를 뒀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 취재가 시작되자 7씨는 "회사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이날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이로써 그를 둘러싼 논란은 끝났다. 대신 황 회장이 삼성 출신들을 검증도 없이 잇따라 영입해 요직에 앉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케이티 내부에서는 황 회장의 경영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회장 말이면 문제가 있어도 실무자들이 토초차 달지 못하는 '황제경영'이 황 회장 체제에서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황 회장은 취임 뒤 7씨 외에 김인희 재무실장(전 삼성전자 상무), 최일성 케이티에스테이트 대표이사(전 삼성물산 상무), 서준희 비씨카드 대표이사(전 삼성증권 부사장), 윤종진 케이티렌탈 전무(삼성전자 홍보팀) 등 삼성 출신들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다. 이미 케이티의 재무관리, 핵심 계열사, 구조조정 담당 등 핵심 요직을 '삼성맨'들이 꿰찼다.

김재섭 황보연 기자 jskim@hani.co.kr

서울경제

2014년 05월 02일 금요일 A11면 산업

삼성 색깔 덧씌우며 조직 개편·미디어협의회 구성

'싱글 KT' 고배 쥘다

황창규 회장 6일로 취임 100일 단독영입 성적이 시험대 될 듯

황창규(사진) KT 회장이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금까지 황 회장의 행보는 전임 이석채 회장의 잔재 지우기와 삼성 색깔 덧씌우기로 요약된다.

첫 출발은 녹록하지 않았다. 취임 직후 '싱글 KT', '1등 KT'의 깃발을 들었지만 개인정보유출, 무궁화 위성 불법 매각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뒷수습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45일이라는 사상 최장 기간의 영업정지도 발목을 잡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대규모 보조금을 살포하며 번호이동 가입자를 흡수할 때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덕분에 KT는 무선시장 점유율이 사상 첫 30% 밑으로 떨어지는 수모를 당했다.

올 1·4분기 실적도 최악이었다. 409억 원의 순손실을 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마케팅 비용이 급등한 탓"이라는 게 KT의 설명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더 많은 보조금을 살포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흑자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연이은 사고와 실적 악화



는 전임 회장 시절 방만 경영의 여파가 반영됐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황 회장은 사고 뒷수습 와중에도 도약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

하고 있다. 우선 130여명에 달하는 임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급여도 깎았다. 명예 퇴직을 통해 8,300여명의 직원을 내보내고, 본사 업무 일부를 자회사로 넘기는 등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든 것이다. 싱글 KT 일환으로 그룹 내에 '미디어콘텐츠 그룹협의회'도 발족시켰다.

그의 능력이 '통신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리트머스 시험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의 진행되는 단독영업 성적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성과는 좋다. 단독영업 나흘간 일 평균 1만명이 훌쩍 넘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낙관할 수 없다. 야심 차게 출시한 '스핀지' 플랜이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어서다. KT가 영업재개 이후 스펀지 플랜을 신청한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이 한 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3S 키' 잡고 풍랑 헤쳤지만... '낙하산' 암초 넘어 초심 지켜야

(스피드·심플·싱글)

6일은 황창규 KT 회장이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황 회장은 취임 이후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한 가운데 내부 혁신에 골몰했다. 황 회장이 취임할 당시 KT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었다. 전임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물러났고 조직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경험했다. 경쟁사에 비해 최대 3배나 많은 조직을 짊어졌지만 해결책은 구조조정 외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황 회장에 대한 개인적 불신도 상당했다. 통신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아픈 평가였다. 비 KT 출신이라는 꼬리표도 계속 따라붙었다. 자존심 강한 조직을 과연 장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왔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사상 최대 사업정지라는 악재까지 터져 나왔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KT는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1차 구조조정을 마쳤다. 황 회장의 100일 개혁은 '무색유취'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요란한 활동은 없었지만 핵심 내부 과제인 조직 개편에 과감하게 메스를 댔다는 평가다. 앞으로 이석재 전 회장 시절 끊임없이 제기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없애나 슬기롭게 막아내고 KT 본연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제라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업정지' 초반 악재 속출
황 회장은 지난 3월 7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취임한 지 불과 한 달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고개를 숙인 것이다.

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더없이 수치스럽다"며 "과거 잘못된 투자와 정책을 바로잡고 원점에서 다시

정보유출·사업정지 악재 속출 대국민 사과 등 빠른 행보

비대한 조직에 과감한 메스 임원 보수 삭감·명퇴 단행

靑수석 출신 선임 등 논란 불지퍼 정권의 고리 끊는 것이 최종 과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사실상 전임 경영진에서 발생한 일이었지만 대국민 사과 형식으로 빠르게 입장을 표명했다"며 "내부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석재 전 KT 회장이 본인 재임기간 중에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사정없이 내세워 사과와 대책 발표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는 것이다.

3월부터는 손발이 묶이는 사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정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각각 45일간 사업정지를 내리는 사상 최대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업정지 마지막 순번인 KT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사실상 개업유업 상태였다.

정부가 소환돼 'CEO직 박탈'이라는 경고도 받아

야 했다. 최권기 미래부장관은 3월 초 이통 3사 CEO를 불러 "불법행위가 다시 나오면 제재 범위를 CEO 개인에 대한 처벌까지 연해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CEO 개인을 고발해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의미였다.

취임 100일도 되기 전에 온갖 풍파를 겪은 것이 황 회장에게 오히려 득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부실한 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오히려 황 회장에게 개혁 명분을 주었다"며 "45일간 사업정지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빠르게 조직을 리빌딩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취임 초기 불거진 일련의 사태가 황 회장 경영 실패라고 보기 힘들다는 여론을 만들었고, 이를 오히려 기존 시스템을 뜯어고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다.

◇속도 내는 황창규식 '스피드' '심플' '싱글' 경영
황 회장은 취임 초기 KT 출신들을 경영 일선에 전면 배치하며 '책임 경영'을 내세웠다.

임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하되 공과를 따져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황 회장은 지난 몇 년간 투자 대비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담초 계획보다 큰 비용이 들었지만 완성하지 못한 대형 프로젝트를 조차해 관련 인원 약 15명을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황 회장 취임 직후 133명에 달하던 임원 숫자가 95명으로 28% 줄었다.

구조조정에 앞서 임원 보수를 줄인 것도 눈에 띈다. 황 회장은 2월 비상 경영을 선포하며 CEO 기준급 30%를 반납했다. 임원들도 기준급 10%를 반납키로 결정했다. KT 관계자는 "황 회장 연봉은 전임

CEO 대비 약 60% 이상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원 보수를 삭감한 데 이어 4월 8일에는 특별 명예퇴직 단행을 선언했다. 전임 CEO가 2009년 1월에 취임해 같은 해 12월 명예퇴직을 시행하기까지 1년 가까이 걸린 데 반해 취임 70여일 만에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확정 발표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반발이 있었지만 상당한 수준의 보상책을 제시해 일단 빠른 시간 내에 몸집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며 "추진력이 상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회장의 취임 이후 행보는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스피드) △조직 슬림화(심플) △분사 중심 그를 경영(싱글)으로 정리된다.

KT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외부에서 제기하던 문제들에 일단 화답한 셈"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100일 이후의 행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정권 입김에 흔들리거나 기대라는 전임 경영진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최근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정 청와대 홍보수석을 선임하고 KT셋사장에 '서강민 포럼' 공동회장 출신을 임명하며 '낙하산 논란'에 불을 지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결국 KT와 정권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황 회장의 최종 과제가 될 것"이라며 "사소한 불찰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비상·책임·현장경영으로 체질개선” VS “1등 KT 비전 글썽…로드맵 내놓아야”

엇갈린 평가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1월 27일 취임하며 “KT 주력인 통신을 다시 일으키고, 융합의 영역으로 발전시켜 1등 KT를 만들 것”이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통신’을 복원하고 ‘융합’으로 KT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한 황 회장 취임 이후 100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황 회장이 지난 100일간 비상 경영, 책임 경영, 현장 경영 등을 역설하며 KT 개혁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상당하다. 하지만 황 회장이 KT 혁신에 대한 청사진은 물론이고 1등 KT를 견인할 미래 비전을 아직 완벽하게 내놓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황 회장이 돌발 악재로 현안 처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아쉽다는 것이다.

황 회장 취임 이후 KT는 자회사 KT ENS 대출사기, 고객 개인정보 유출, 불법 보조금에 따른 사업 정지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회장이 내건 1등 KT를 위

한 구상은 KT 임직원 지지는 물론이고 변화를 유도했다. 기대감도 상당했다.

이는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다.

KT 경쟁력 요체인 통신과 무관한 이종 영역으로 확장만을 일관한 전임 경영진의 전략에 반감과 피로감과 함께 KT가 처한 상황이 최악이라는 판단이 중첩된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해 매출 23조8106억원, 영업이익 8393억원, 순손실 60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영업이익은 30.6%p 줄고 순이익은 적자로 전환, 창사 이래 최초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실적도 저조했다.

당장의 실적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돌파구가 여의치 않다는 위기의식도 혁신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

전통적으로 KT 효자 사업인 유선 부문 침체는 지속되고, 반전의 여지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선 부문 또한 하락세다. 4세대(4G) LTE 시장에서 고전과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시장점유율 30%가 붕괴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고의 품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장에 먼저 제공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융합서비스로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며, KT의 성공스토리로 글로벌 시장을 리딩하겠다는 황 회장의 혁신 의지는 KT 임직원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와 다른 평가도 나온다.

KT 미래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다. 비상 경영, 책임 경영, 현장 경영 등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때문에 황 회장의 혁신 의지가 자칫 ‘장밋빛’ 구호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황 회장이 취임 이후 100일간 혁신을 위한 기본 골격을 세운 시기였다면,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황 회장이 KT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게 전제돼야 KT 임직원의 지지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황 회장이 눈앞의 과제인 이통시장 점유율 30% 회복에 대한 목표라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황 회장이 역설한 1등 KT를 위한 통신 본연의 경쟁력 회복에 절호의 기회이자 분수령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황 회장이 1등 KT를 위한 구체화된 목표와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는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통신의 본원적 경쟁력을 되찾기 위한 전략은 물론이고 융합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실천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장 개척 방안도 마찬가지다.

분명한 목표는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자극제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일신하는 전환점으로, KT 역량을 결집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KT 혁신을 위한, 1등 KT를 선언한 황 회장의 100일 이후 최우선 과제가 그동안 ‘총론’에서 ‘각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숫자로 본 100일

1200만 고객 정보유출

8304명 명예퇴직자

79개 지사 광역화

KT는 황창규 회장 체제 출범 이후 약 3개월 동안 구조조정, 조직개편 등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악재가 지속됐다. 이동통신사발 보안사건 중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KT 사상 최대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1200만

지난 3월 6일 인천 광역수사대는 KT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1년간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일당을 적발했다.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전화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요금제·연체이력 등이 통째로 빠져나갔다. 황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피해 보상과 정부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등은 피해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00만명은 KT 홈페이지 가입자의 4분의 3에 이르고, 이동통신사 업계에서는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8304

황 회장 취임 뒤 처음 빼든 카드는 조직 슬림화다. 임원 수를 약 20% 줄이는 한편 지난달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KT는 최고경영자(CEO)가 바뀔 때마다 특별 명예퇴직을 추진했다. 지난 2003년 이용경 사장 취임 당시 5500명, 지난 2009년 이석채 회장 때 6000명을 정리해고했다. KT는 지난달 30일 명예퇴직자를 총 8304명으로 확정했다. KT 구조조정 역사상 최대 규모다. 근속 15년차 이상 2만3000명이 대상이지만 10년차 이하 젊은 직원들이 상당수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9

기존 236개 지사를 통합해 79개로 광역화했다. KT 창사 이래 가장 적은 지사를 거느리게 됐다. 조직개편으로 인력이 줄어들면서 전국 지사 통폐합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인력 축소와 지점 폐쇄로 기존 이석채 회장이 추진해 온 부동산 매각 전략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오은지기자

ETRI·삼성전자·SKT, 이동통신 발전에 큰 기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앙일보·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모바일 혁신 어워즈’ 시상식

개인상엔 윤동윤·조정남·한기철씨

중앙일보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공동 후원하는 ‘모바일 혁신 어워즈’ 시상식이 지난달 30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 상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이동통신 역사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한국의 이동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에 주어지는 모바일 혁신상(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삼성전자·SK텔레콤이 받았다. ‘기술개발 혁신상’을 수상한 ETRI는 정보·통신·전자 등 융복합 기술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을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이끈 공로로 삼성전자가 ‘디바이스 혁신상’을, 이동통신 시대를 선도하고 통신사업을 발전시킨 공로로 SK텔레콤이 ‘서비스 혁신상’을 각각 수상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모바일 혁신 공로상’(중앙일보 대표이사상)은 윤동윤(76) 전 체신부 장관, 조정남(73) 전 SK텔레콤 대표이사 부회장, 한기철(62) ETRI 통신인터넷연구소 책임연구원에 돌아갔다.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산업계·학계·관계의 대표인사에게 수여하는 미래부 장관 감사패는 홍순호(62) 전 삼성전자 부사장, 박항구(68) 소암시스템 회장, 신용섭(56) EBS 사장이 받았다. 이들 수상자는 이동통신 업계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모바일 혁신대상 선정위원회’가 추천받은 후보자들을 심사해 선정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축사에서 “1990년대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휴대전화는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 됐다”며 “기업과 학계·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한국 특유의 문화가 우리보다 한참 앞섰던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은 비결이었다”며 “이통업체들이 물을 지키면서 경쟁한다면 한국의 ICT경쟁력은 더욱 앞서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한국 이동통신 30주년을 기념해 제정된 ‘모바일 혁신 어워즈’ 시상식이 지난달 30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정남 전 SK텔레콤 대표이사 부회장, 중앙일보 김교준 편집인,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 윤동윤 전 체신부 장관, 한기철 ETRI 책임연구원,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황중연 상근부회장, 김홍남 ETRI 원장, 홍순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신용섭 EBS 사장, 박항구 소암시스템 회장, 박인식 SK텔레콤 사업총괄, 이철한 삼성전자 사장, 설정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강정현 기자

보조금 경쟁은 그만, ICT 융복합에 승부 걸어라

(정보통신기술)

수상자들 좌담회

1996년 CDMA기술 상용화 성공 세계 이동기술 주도하는 계기 돼

30년 전 한국이동통신서비스(SK텔레콤의 전신)가 설립됐을 당시만 해도 이동통신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는 컸다. 1946년 미국 벨이 처음 차량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지 40년 가까이 된 84년에야 국내에 카폰을 들여왔을 정도였다. 한국에선 88년 시작된 휴대전화 서비스도 미국에서는 73년 등장했다. 하지만 96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2세대(2G)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기술 상용화에 성공한 후부터는 세계 이동통신 기술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2002년 세계 최초로 3세대(3G) 서비스를, 지난해엔 다시 세계 최초로 4세대(4G)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까지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최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이동통신 산업이 30돌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열린 ‘모바일 혁신 어워즈’에서 수상자들은 한국 이동통신의 과거와 미래를 조명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이 ICT 강국으로 도약하게 된 전환점은.

▶윤동윤 전 체신부 장관=93년 디지털 이동전화 기술표준을 정하면서 CDMA로 가느냐, 시분할다중접속(TDMA)으로 가느냐

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정치권·학계에서는 외국에서 성능이 입증된 TDMA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의견을 믿고, CDMA를 선택했다. 당시 언론에서 엄청난 비난을 했지만 결국 ETRI가 옳았다. 한국은 CDMA 방식을 선택하면서 최신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고 상용화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신용섭 EBS 사장=ETRI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했다. 빠듯한 개발 일정에 야근과 밤샘은 일상이 됐고, 새벽에 호출을 받고 나오는 일도 빈번했다. 당시 정보통신부에서 일할 때인데 추석 연휴 때도 집에 안 보내준다고며 연구원 가족들의 항의가 빗발쳤던 기억이 난다. 90년대 초반 세계 휴대전화 시장을 지배하던 모토로라는 한국이 CDMA를 개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방심했다. 우리가 모토로라보다 CDMA를 먼저 상용화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위상은 남의 얘기였을 것이다.

▶한기철 ETRI 책임연구원=CDMA 도입은 당시 국내 인프라와 단말을 완전히 장악하던 모토로라를 내보내고, 한국의 기술적 자립을 가져왔다. 나중에 모토로라 고위 관계자가 “한국이 최소한 3년 걸릴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성공한 게 놀랍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루 8시간 일하는 기준으로라면 3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24시간 일한 셈이니 틀린 계산은 아니다”라고 말해줬다.

-한국의 ICT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조정남 전 SK텔레콤 대표이사=국가가 기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기술자 이 세 축이 조화를 이루면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돌아보면 정부는 과감하게 정책을 펼쳤고, 기술자들은 쉬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으며, 기업은 이들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 이 셋의 힘으로 한국 ICT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위기론도 나온다.

▶윤동윤=아직도 이동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하는 게 안타깝다. 이젠 서비스 질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식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부에서는 요금인가제 같은 낡은 규제를 없애고, 이동사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동사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직접 팔면서 보조금 주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TV 사는데 방송사가 보조금을 주는 격이다. 소비자가 일반 가전매장·쇼핑몰 등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뒤 원하는 이동사를 선택해 가입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해달라.

▶한기철=한국의 인구 구조상 이동통신 가입자를 더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이 확장되면 사람이 아닌 기계를 가입시킬 수 있다. 폐쇄회로TV(CCTV)를 통신과 연결한다든지, 각종 센서를 네트워크로 묶는 식이다. 5G 통신기술이 상용화되면 이통신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박항구 소암시스텔 회장= ICT와 다른 산업의 융합이 필요하다. 바이오·자동차·조선 등의 산업에 ICT를 접목하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생산 유효과를 불러온다. 물론 ICT 본연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ICT 기술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타 산업과의 융합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융복합 시대에 이통산업이 어디로 진출할 수 있을까.

▶홍순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주요 사회 인프라나 무인항공기·로봇 등에는 이미 이동통신이 접목돼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융복합이 늘어날 것이다. 농수산물에 접목시키면 스마트 농업이 된다. 소비자들이 농수산물의 생산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든지, 각종 농축산물을 도시 소비자와 연결해 직거래를 도와주는 식이다.

▶신용섭=이제 통신과 방송의 칸막이도 사라졌다. 예전에는 모바일 서비스가 음성 통화 기반의 ‘오디오’ 중심이었다면 이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비디오’ 중심이다.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창의력 있는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유통시키면 새로운 벤처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다. 정라=손해용 기자

hysohn@joongang.co.kr

정부·국내외 기업 IoT 육성 손잡았다

<사물인터넷>

정부가 삼성전자, SK텔레콤, 시스코, 오라클 등 국내외 주요 IT 기업들과 손잡고 사물인터넷(IoT) 관련 교육과 창업자 발굴 등 IoT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일 미래부 관계자는 “오는 13일 국내·외 IT 기업들과 함께 IoT혁신센터를 열고 IoT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IT 기업과 시스코, 오라클, IBM, 인텔 등 글로벌 주요 기업 포함 총 14개 기업이 참여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다

삼성·LG·SKT·시스코·오라클 등 14개 기업 참여 13일 맞춤형교육·창업자 발굴 ‘IoT혁신센터’ 개소

보스포럼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존 챔버스 시스코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스코가 국내 IoT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 이번 사업은 시스코의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현재 시스코와 영국

정부가 진행 중인 IoT 관련 사업(BIG)을 벤치마킹했다는 설명이다.

서울 서초동 동아타워에서 문을 여는 IoT혁신센터는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중심이 돼 다양한 글로벌 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IoT 기업가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창업자에게는 스

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DIY(Do It Yourself) 방식의 지원이 이뤄진다.

미래부는 또 IoT 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실증, 시범사업 사업화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전통산업에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IoT 소프트웨어·제품·서비스 거래와 인력 매칭을 지원하는 온라인 마켓 구축도 검토된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2면에 계속

정부·국내외 기업 IoT육성 손잡았다

➡1면서 계속

미래부는 IoT혁신센터 외에도 다양한 IoT 산업 육성 사업에서 14개 국내외 IT 대기업들과 공조, 협력할 방침이다.

미래부 측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IoT 시장을 현재 2조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상위 50개 전문기업의 평균매출액을 1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은 만큼 각국이 관련 예산을 경쟁적으로 책정하며 IoT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IoT가 국가 산업경쟁력으로 부상한 만큼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정부 주도의 IoT 산업 육성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50억위안(약 8240억원) 규모의 IoT 산업 투자기금을 조성했고, 영국 정부도 4500만파운드(약 78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IoT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 IoT 육성 기본계획이 국가 ICT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상정돼 범정부 차원의 IoT 육성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 ICT R&D, NIPA로 통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예산 1조851억원…두 배 넘게 증액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통합된다. NIPA 예산은 종전 4485억원에서 1조851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정보화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결과를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기능조정은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기재부는 ICT 특별진흥법에 따라 정보화 R&D를 다른 산업 R&D에서 분리해 NIPA로 통합한다고 설명했다. 종전 ICT R&D 정책은 NIPA·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콘텐츠진흥원(KOCCA), 기획·평가·관리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KCA·KOCCA, 기술사업화는 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 분산관리됐다. 앞으로 NIPA가 ICT R&D 전주기를

관리한다.

그동안 산업부(ICT일반),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 미래부(ICT 일반, 전파통신) 산하 여러 공공기관에 분산된 기능이 통합돼 관련 투자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공공기관에 분산된 ICT R&D 인력(총 137명)은 NIPA 내 ICT R&D 전담조직으로 통합했다.

이밖에 ICT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사물인터넷 등 ICT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역량 위주로 공공기관간 기능을 조정했다. 인터넷진흥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NIPA로 통합했다. 다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물인터넷, 사물통신(M2M) 등 인터넷 신사업도 NIPA로 일원화했다. 전자거래·전자문서 관련 업무는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NIPA에서 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총리실 주관 범정부 TF가 전반적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디지털타임스

2014년 05월 02일 금요일 002면 종합

ICT R&D기능 NIPA로 통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공기관 분산인력 합쳐… IoE·M2M 등 인터넷신사업도 담당

그동안 산업부와 문화부, 미래부 등의 산하기관에 분산돼 있던 ICT(정보통신기술) R&D 기능을 미래부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통합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같은 '정보화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결과를 30일자로 관련부처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ICT R&D 기능은 정책의 경우 NIPA·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콘텐츠진흥원(KOCCA)이, 기획·평가·관리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KCA·KOCCA이, 기술사업화는 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NIPA가 이를 총괄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관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분산된 ICT R&D 인력 137명을 NIPA 내 ICT R&D 전담조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NIPA의 정원은 현재 303명에서 387명으로 늘어나며, 예산은 4485

ICT R&D 조직 통합도



억원에서 1조851억원으로 6366억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또 ICT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사물인터넷 등 ICT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역량 위주로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인터넷진흥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NIPA로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다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IoE(Internet of Everything), M2M(Machine to Machine) 등 인터넷 신사

업도 NIPA가 담당하게 된다.

다만 전자거래·전자문서 관련 업무는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NIPA에서 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최근 현안으로 부각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TF에서 전반적인 대책을 논의중인 만큼 논의 결과에 따라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포럼

개인정보 수집, 시장 자율성 확대해야



함 정 식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고객 신용정보 다양할수록
정보의 사회적 가치 높여
금융경쟁력 제고 가능
보안투자와 시스템 정비로
정보유출 막고
금융산업 발전 앞당겨야

올해 1월에 발생한 일부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 발생 이후로 1분기 내내 정보유출고지의무 이행, 카드해지 및 재발급 진행, 입법 및 행정 당국의 대응방안 수립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자칫 규제 일변도의 일방통행으로만 흘러가게 돼 정보의 합리적인 이용보다는 지나친 보호에 경도되어 규제 철폐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게 되고 우리나라 금융 및 정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수 있는 점이

다양한 상황을 참고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살펴보자. 특히 금융 및 정보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입법기관이나 정부당국이 고객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에 관해 금융기관, 정보회사 또는 마케팅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정부와 기업 모두 다음에 기술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활용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개념을 우리도 함께 숙지하고 정책 수립 및 규제를 만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노하우를 선제적으로 쌓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대출제공 및 카드발급) 및 부가서비스(혜택)를 제공해 주는 반대급부로 고객의 동의를 얻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금융기관의 소중한 재산이고, 이를 활용해 금융기관이 수익성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의 일부가 금융소비자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 고객의 신용정보 자료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신용

정보처리기관의 경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보처리기법이 향상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고도화되기 때문에 신용평점(등급)의 유효성과 예측력이 높아져, 이는 정보비대칭을 줄여주고 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금융 경쟁력을 높여줌으로서 금융소비자 혜택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신뢰가 사회에 깔려 있다.

또 고객의 동의를 얻어, 금융그룹 내 계열회사간의 개인 정보 공유를 통해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금융그룹 내 계열회사들 사이에 고객 신용도 변동요인을 교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의식도 공유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도 교차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제3자 에이전트 제휴계약을 통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 금융그룹 전체의 비용절감과 추가 수익확보가 가능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객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에 있어 시장 자율성을 높여주면,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필요 이상의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분도용과 부정사용 등의 실질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또 텔레마케터들의 무차별적인 마케팅으로 사생활 보호 침해 사례가 빈번해 질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보안투자 확대와 보안시스템의 체계적 정비로 해결하고 유출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배상제도 도입으로 해결할 문제로 보아야 한다. 정보의 수집이나 처리 및 이용을 제한하여 민간 자율성을 떨어뜨려 정보산업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보 강국을 만들기 위해 어느 한 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은 정책 수립과 활용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시론

기업 불법행위 법적 구제제도 뜯어고치자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우리 경제는 산업화시대를 넘어 개인의 인격과 창의력을 존중함으로써 성숙한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선 지 오래이지만 사법 분야는 여전히 산업화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화시대에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근로자나 소비자 개인들의 희생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사고가 지배했다. 그러한 사고가 사법의 영역에도 뿌리를 내려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기업 편향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결함 있는 제품 판매, 담합, 대형 사고,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개인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너무나 힘든 고비들을 넘어야 한다.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입증이 어렵거나 배상액이 턱없이 적다. 사실상 소비자나 개인에게 피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최근 특허침해를 어렵게 인정받았는데 배상액은 변호사비용에도 못 미치는 소액이어서 “우리나라에선 특허가 있어도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보도가 나왔다. 예순 넘은 부모가 수술 중 갑자기 사망한 경우 양심적인 변호사라면 소송을 포기하라고 권유하는 게 맞다. 의료 과오를 입증하는 큰 산을 어렵게 넘어봤자 배상액은 몇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얼마 전 한 기업인의 일당 노역액이 5억원이어서 논란이 됐는데, 법원의 사망사고 위자료액 가이드라인은 8000만원에 불과하다. 조금 격하게 얘기하면 누구의 일당은 5억원이고, 누구의 목숨값은 8000만원인 셈이다. 또 2013년 2월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2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지만 손해배상액이 20만

“
개인이 소송으로 배상받으려면
힘든 고비들 넘어야 하는 현실
배상액 높이고 입증책임 완화해야
징벌적 배상 등 제도 손질도 필요



원이라는 것은 섣뚱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입증책임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법원이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유출이 모두 기업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함에도 피해자 개인에게 2차 피해의 발생을 입증하라는 것은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결함을 확실하게 입증하라고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

미국 법원의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입증책임을 완화해 사실상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회사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미국 등 외국에서 결함으로 인정된 선례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문제점이 있음이 소명된다면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보는 입증책임을 완화를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 징벌적 배상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 인격권 침해, 소비자 피해, 개인정보 침해, 차별로 인한 피해 등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만 보아도 그렇다. 주요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불안감이 사그라지기도 전에 KT에서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KT는 2004년과 2012년에도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전력이 있다. 벌써 세 번째 유출 사고다. 강력한 제재 없이는 기업 스스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법정의견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사회적·경제적 사건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기관·단체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이 제도의 활용은 관련 사건에 관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소송당사자로서 열위에 있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격한 시위문화가 사라지고 성숙한 자본주의가 시행착오 없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의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에 거액의 벌금과 준법감시시스템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미국식 불기소 협약(NPA)과 기소연기 협약(DPA)도 검토해볼 만하다. 지난해 3월 도요타사는 미국 법무부에 12억 달러(약 1조3000억원)의 벌금을 내고 급발진 결함 은폐 문제 수사를 끝내기로 합의했는데 이것이 바로 불기소 협약이다.

법원은 ‘기업이 망한다’는 엄살에 더 이상 겁먹으면 안 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지금은 국민 희생을 통한 기업보호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잃었다. 고액인 개인, 미래 성장동력 제공자로서의 창조적 개인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할 때만 기업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행위로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함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비합리적 관행의 타파가 시급하다.

정부 ICT R&D 통합 후유증 최소화 해야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기능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로 통합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기획재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관련 공공기관 기능 조정 결과를 확정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진흥원, 인터넷진흥원의 관련 예산과 인력이 NIPA로 옮겨간다. NIPA는 1조 851억원 예산에 정책·기획, 평가·관리, 성과 확산, 기술거래 등 ICT R&D 전 주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거듭났다.

통합을 했지만 본격 가동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산보다 인력 이동 문제다. 기재부가 기관별 이관 인력규모를 확정했지만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른 임금체계 조정에 근무지 이동까지 이관 작업이 수월치 않다. 그 다음도 문제다.

이관이 끝나도 옛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역할을 당장 수행하기 어렵다. 과거처럼 또 다시 달라진 업무 프로세스와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이관과 적응 기간이 길어지면 업무 공백은 불가피하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정확한 임무 설정이다. 옛 IITA처럼 기존의 여러 R&D 과제를 관리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지금과 달라진 것이 없다. ICT특별진흥법까지 만들며 기능을 통합한 만큼 할 일 또한 과거와 달라야 한다. 넓어진 예산과 인력 운용 폭 전부를 쏟아 부을 수 없겠지만 혁신 선도 기술 R&D에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통합 지연과 후유증으로 시간만 허비하면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 이후로 넘어간다. 가시적 성과를 박근혜정부 힘이 약해질 임기 말에나 보일 가능성이 있다. ICT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IITP를 빨리 가동해야 이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다. NIPA는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 시비를 부를 수 있겠지만 파격적인 대우와 업무 환경을 새 유인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수 인력을 더 끌어 모으며 통합 후유증을 최소화해 IITP를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 취지가 ICT 기반 창조경제 산실을 만든다는 것인 만큼 기재부와 미래부도 발상을 파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설

정쟁에 휩싸여 밥값 못하는 '식물' 비판을 받은 국회가 30일 각 상임위를 열어 그간 계류돼 있던 법안들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지난 2년여간 방치했던 130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일괄 상정해 '똑딱' 통과시켰다.

세월호 침몰참사로 온 나라가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라도 뒤늦게 제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아주기를 기대했겠지만, 밀린 숙제 베퉼치기에 박수를 보내기엔 결과물이 너무 형편없다.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불과 며칠 앞두고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진행한 졸속처리는 부실한 법안들만 양산할 뿐이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후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국정조사를 하면서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관련 법률 개정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않았다. 각기 다른 부처와 상임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치에 맞는 개정안을 끌어냈어야 했는데도 말이다.

미방위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이번 개정작업에서 중복 규정을 삭제, 개편하고 보완하는 게 무엇보다 절실했다. 이를 위해 이미 범정부 TF에서 논의까지 진행했으나, TF의 소중한 결과물은 법안에 담지 못했다. 개별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발의한 각종 규제 법안들만 무더기로 통과됐다.

'구멍' 드러난 정보보호 관련법 졸속처리

지난 1월 터져 나온 1억건이 넘는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정부대책,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얼마나 높았었나.

사고 직후 금융권은 물론, 정부부처, 국회도 모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못하도록 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설 태세였다. 금융권은 금방이라도 보안투자를 단행할 분위기였고, 국회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관련법 손질을 통해 정보유출과 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그 때뿐. 19대 국회 상임위 전반기 종료를 며칠 남기지 않고 처리된 개인정보관련 법률안들은 구멍송송 뚫린, 현재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보는 듯 하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을 다루는 것이어서 소관 부처, 상임위도 모두 달랐다. 따라서 정부부처간, 국회 상임위간에도 칸막이를 허물고 깊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중복을 피하고,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형태로 개정해야 했다.

이런 비판에선 정무위도 자유롭지 못하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논란이 됐던 계열사간 정보공유(48조의2항)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1개월로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수준에서 개정됐다. 1개월이면 정보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금융업체들의 입장을 고려한 형식적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안소위를 통과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전체회의에서 논쟁이 지속돼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는 2일 각 상임위가 처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연휴 뒤 새로운 상임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후반기 활동에 접어든다. 상임위원들도 대거 교체된다.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은 졸속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에 시행될 것이다.

시행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19대 국회 후반기에서라도 상임위간에 칸막이를 허문 토론을 통해 중복되고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게 개인정보 유출사고다. 개인정보보호는 미리 하는 것이다.

朝鮮日報

2014년 05월 02일 금
A10면 사회

인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사무총장 오
수동
▲OBS▷경영국장 오창희▷보도국
장 김학균

朝鮮日報

2014년 05월 02일 금요일
A10면 사회

▲성진숙 별세, 황용석 티엘성형외과
원장·황민교 모친상, 이수희 LG화학 과
장 장모상, 이현주 코바스코리아 임상
팀 과장 시모상=1일0시30분 연세강남
장례식장, 발인 3일5시, (02)2019-4002
▲염순란 별세, 박영준 금융감독원 소
비자보호총괄국 선임조사역·박미경
·박해구 한국화학연구원 근무 모친상,
조우철 삼택건축사사무소 실장 장모상,
노민영 시모상=30일15시 창녕군공설
장례식장, 발인 2일8시, (055)533-8510
▲이순임 별세, 박성옥 목사·박병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팀장·박승찬
대전덕명중 교사·박성호 대전중부경
찰서 경위 모친상=1일15시 충남대병
원, 발인 3일9시30분, (042)257-6943
▲정기봉 별세, 정임균 서울시교육청
정독도서관장 부친상=1일4시 을지병
원, 발인 3일6시, (02)970-8751
▲최분희 별세, 이석중 강원외고 교장
부인상, 이규윤 CNPS 근무·이규성
삼성중공업 근무·이규호 모친상, 최
형석 CNPS 대표 장모상=1일15시40
분 강원효장례문화원, 발인 3일8시,
(033)261-4441
▲황둔 별세, 황진선 법률신문 편집국
장·황화숙 부친상, 권순택 동아일보
출판국장 장인상=1일11시47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7시40분,
(02)2227-7547

▲김팔례 별세, 강희봉·강희문·강희
자·강희옥·강희선·강희태 롯데백화
점 부사장 모친상, 이종계·석인호·홍
성명 장모상, 강형규 조모상=1일5시
1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7시30분,
(02)3410-6917
▲김헌기 前 강릉시 교육장 별세, 김
남두 前 제일기획 상무 부친상=30일
23시 강릉아산병원, 발인 3일8시,
(033)610-5981